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콘서트 규제 강화

산업·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사회·복지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위해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도시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교통 청사진'
발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	〈유럽〉
미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시카고강기향	쿠알라룸푸르홍성아	암스테르담장한빛
올랜도박혜진	인도	독일
하와이임지연	뉴델리박원빈	베를린홍남명
휴스턴이경선	박효택	프랑크푸르트이은희
캐나다	인도네시아	스페인
에드먼턴장지훈	자카르타박재현	바르셀로나진광선
토론토고한나	중국	이탈리아
〈아프리카〉	광저우손지현	로마서동화
케냐	베이징정민욱	피렌체김예름
나이로비한울	충칭모종혁	프랑스
		파리김나래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콘서트 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문화·관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최근 국내외에서 계속되는 군중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 및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예방을 위해 콘서트 행사 허가·운영에 관한 규제를 강화

배경

- 최근 군중 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
 - 2022년 10월 동부 자바의 축구장에서 관중들의 운동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경찰의 최루가스 살포로 174명이 압사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압사 사고 역시 인도네시아의 주요 미디어에 헤드라인으로 보도
- 최근 콘서트장에서 관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콘서트가 대거 취소·연기된 상황
 - 10월 28일에 자카르타 시내에서 열린 Bersyang Bersendang 음악 축제 첫째 날에 27명이 산소 결핍으로 인한 실신으로 병원으로 호송됨에 따라 경찰당국이 이튿날과 셋째 날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
 - 경찰 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3,000명을 훨씬 넘는 2만 장의 입장권이 판매되어 혼잡 및 인적 피해를 야기
 - 11월 4일에 자카르타 교외에서 열린 한국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에서 입석으로 관람하던 일부 관객들이 무대 앞으로 밀려들면서 30명 이상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최 측이 콘서트를 중단하고 경찰이 관객을 해산시킴
 - 11월 12일에 자카르타 국제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7만 명 규모의 Dewa 19 콘서트는 자카르타지방경찰청이 허가를 미루고 안전 확보 방안을 재검토함에 따라 2023년 2월 4일로 행사가 연기됨
 - 이 외에도 11월 10일~12일에 자카르타 시내에서 개최 예정이던 K-pop 콘서트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콘서트가 모두 안전 문제 재검토로 2023년으로 연기됨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주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사로 이루어진 플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州政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주요 내용

- 자카르타州 관광창조경제국은 11월 11일부터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콘서트 행사에 새로운 규제를 실시
 - 행사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자정까지로 제한하고, 관객 수는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로 제한
 - 행사 주최 측은 코로나19 TF의 추천장, 자카르타지방경찰청의 임시공연목록 승인 및 군중 허가(crowd permit) 사전 획득이 필수가 됨
 - 입장로 및 퇴장로, 행사부스, 대피로 등의 배치와 군중 통제 관리 방안이 확실한 주최자에 한해 허가
 - 최근 자카르타 및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재확산됨에 따라, 1.5미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4시간마다 새것으로 교체, 손 세정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역시 중요해짐
 - 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10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 수준이 격상됨
- 자카르타 인근 대도시인 베카시市는 야외 개방 공간에서의 음악 행사를 모두 금지
 - 음주와 질서 파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실내공간에서 수용 가능 인원 내 규모로만 허가
-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콘서트 행사 허가 건수가 당분간 줄어들 전망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11/04/22574051/kesaksian-penonton-saat-konser-nct-127-di-hentikan-fans-saling-dorong?page=all#page2>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11/03/12484011/penonton-berdendang-bergoyang-lampau-ka-pasitas-polisi-izinnya-3000-tapi?page=all#page3>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11/03/11010631/belum-izinkan-konser-dewa-19-polda-metro-berkaca-pada-itaewon-dan?page=all#page3>

<https://www.kompas.com/hype/read/2022/11/06/114615266/sederet-konser-yang-ditunda-dan-dibatalkan?page=all#page2>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11/11/20220791/aturan-baru-konser-di-jakarta-pengunjung-70-persen-dari-kapasitas-pukul>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2/11/10/10580261/heru-budi-minta-perizinan-konser-di-jakarta-dibatasi?page=all#page2>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인도 델리 NCT¹⁾ / 산업·경제

델리 NCT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함. 공유 주방과 푸드트럭 사업의 인프라 조성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

정책적 배경

- 인도 경제모니터링센터(CMIE)에 따르면, 인도와 델리 NCT의 2022년 9월 기준 실업률은 높은 수준인 6.5%, 9.6%로 각각 나타나고 있음. 이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기인함
-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델리 NCT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백만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 중임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푸드테크(Foodtech)²⁾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방(Cloud Kitchen) 및 푸드트럭(Food truck)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임
 - 코로나19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기반 배달 문화가 조성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공유주방 정책(Cloud Kitchen Policy)
 - 공유주방은 주방을 임차하여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을 의미하며, 코로나19 봉쇄령 시기를 시작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크게 확대되었음
 - 공유주방은 낮은 비용에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지역 내 2만 개 이상 수준으로 매년 20%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2019년 4억 달러에서 2024년 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델리 소통개발 위원회(DDC)는 지역 내 산업지구에 공유주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2)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에 기술 개념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의미

- 지역에 유치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자 함
- 클러스터 내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고 운영과 관련된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
 - 산업지구 내 전력, 상수도 등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클러스터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 및 배달용 주차 공간을 구축
- 5년 동안 3만 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푸드테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자체 애플리케이션 등의 기술을 접목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임대료 상승, 3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규제 및 행정 간소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
- 푸드트럭 정책(Food truck policy)
 - 푸드트럭 도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푸드트럭 허브를 설립하는 형태로 인도 최초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
 - 지역 내 공원, 주차장, 축제 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현지 및 세계 요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및 야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
 - 현재 푸드트럭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착수 단계에 있으며, 관련하여 5년 동안 1천 5백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정책 평가

- 판매자인 소상공인은 시장 접근성과 수익성을 확대하고, 소매자인 지역 주민에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즉석식품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의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발굴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푸드트럭 사업은 지역 내 야간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간편결제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푸드테크 시스템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식품산업의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진] 푸드트럭 모습 (출처: 더 폴리스 타임즈)

<https://www.brandequity.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business-of-brands/delhi-govt-to-bring-food-truck-policy-soon-manish-sisodia/93616432>

<https://www.ddc.delhi.gov.in/our-work/7/cloud-kitchen-policy#:~:text=Delhi%20Government%20is%20very%20hopeful,of%20the%20cloud%20kitchen%20industry>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cloud-kitchen-policy-delhi-stakeholder-consultation-7885103/>

<https://www.outlookindia.com/national/delhi-govt-starts-identifying-land-for-setting-up-food-truck-hubs-news-197171>

[https://www.studyiq.com/articles/unemployment-rate-in-india/#:~:text=Highest%20Unemployment%20Rate%20in%20India,-The%20states%20with&text=The%20Centre%20for%20Monitoring%20Indian%20Economy%20\(CMIE\)%20reported%20that%20India's,increase%20to%20208.3%25%20in%20August](https://www.studyiq.com/articles/unemployment-rate-in-india/#:~:text=Highest%20Unemployment%20Rate%20in%20India,-The%20states%20with&text=The%20Centre%20for%20Monitoring%20Indian%20Economy%20(CMIE)%20reported%20that%20India's,increase%20to%20208.3%25%20in%20August)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govt-panel-to-ease-regulations-to-boost-cloud-kitchen-segment/article65360623.ece>

<https://www.thepolicytimes.com/food-truck-policy-soon-to-be-implemented-in-delhi/>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위해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중국 베이징시 외 / 사회·복지

2018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전자담배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발표했고, 11월 1일부터는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구성품인 카트리지, 흡연도구 등에 소비세를 부과. 소비세 부과 목적은 젊은 층과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데 있음

2022년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구성품에 소비세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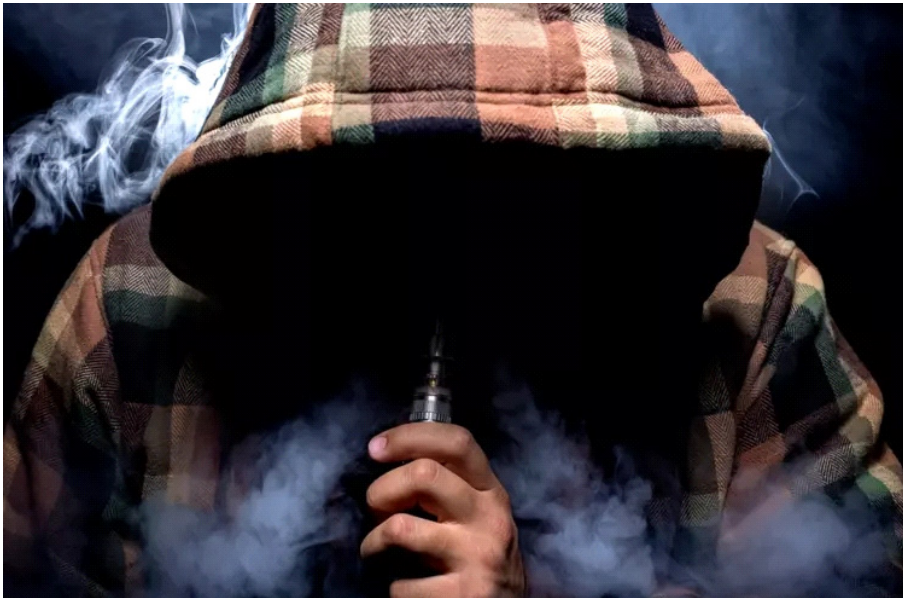
- 10월 2일 중국 중앙부처인 재정부, 해관(海關)총서, 세무총서¹⁾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시에서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電子煙)에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공동 발표
 - 중국 당국은 전자담배의 정의와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여,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조립체인 카트리지(cartridge), 분무 화합물을 흡입할 수 있는 에어로졸(aerosol)²⁾로 전환하는 전자장치이자 기화장치인 흡연도구 등 구성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
 - 중국 당국이 규정한 전자담배는 에어로졸을 생성하여 사람들이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전송 도구와 시스템을 의미
 -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종가세(從價稅)로, 생산 및 수입 소비세 세율은 36%, 도매 유통에는 11%의 소비세를 부과
 - 여기서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에 맞춰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고, 생산 및 수입 소비세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2021년까지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한 상품 코드가 없어서 외국으로부터 얼마나 수입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22년은 9월까지 전자담배 카트리지 3,136만 달러 치가 외국에서 수입됐고 그중 71%가 미국산임
 - 전자담배 흡연도구는 중국 시장에서 자국산이 88.8%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

1) '해관총서'는 한국의 관세청, '세무총서'는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

2) '에어로졸'은 액체나 고체의 입자가 주로 공기와 같은 기체 내에 미세한 형태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킴

소비세 부과는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가 목적

- 중국에서 소비세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상품, 사치성의 고가 상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 등을 겨냥해서 부과하는 세금
 - 평소 국민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부유층의 과도한 소비를 막아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며, 에너지 소모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
 - 이에 따라 소비세의 과세 품목에는 ▶술, 담배 등 건강에 해로운 상품, ▶요트, 골프채,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사치품, ▶일회용 나무젓가락, 석유 등 자원소모형 상품 및 재생 불가능한 소비품 등이 있음



[그림] 전자담배를 피는 중국의 젊은 남성을 형상화한 이미지 (출처: 와이뉴스)

-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젊은 층과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흡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음
 - 2021년 5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흡연 위해 건강보고서 2020>에 따르면, 중국은 14억 명의 전체 인구 중 흡연자가 3억 명이 넘어서 전 세계 담배 소비 인구의 40%를 차지
 - 2018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전자담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지금은 중장년층까지 확대
 -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전자담배가 인체에 대한 피해가 적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덜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갔고, 다양한 전자담배의 구성품이 '쿨한 유행품'으로 선호

-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음. 실제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시는 전자담배 흡연을 단속하는 조례가 없음
- 이렇듯 전자담배를 이용한 젊은 층과 청소년의 흡연이 급속히 늘어나자, 2022년 들어 중국 당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발표
 - 3월 11일 중국에서 담배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인 연초전매국(煙草專賣局)은 ‘전자담배관리판법(管理辦法)’을 발표하여 5월 1일부터 시행
 - 전자담배관리판법의 핵심 내용은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과일 맛 등 다양한 향을 첨가하는 행위 금지. 이는 중국 생산업체들이 흡연도구에 다양한 향을 첨가하여 젊은 층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했기 때문
 - 6월 15일 연초전매국은 전국 통합의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을 출범
 - 중국에서 연초전매 관련 허가증을 취득한 전자담배 생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은 이 플랫폼에서 모든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거래하도록 규정
 - 10월 1일 연초전매국은 전자담배에 대한 강제적인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시행
 -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담배는 ▶연초 이외 과일 맛 등의 첨가 금지,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카트리지의 폐쇄식 구조만 허용, ▶흡연 도구를 통한 기화과정에서의 니코틴 농도는 20mg/g 이내, 니코틴 총량은 200mg 이내로 규정, ▶기화물 중에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알데히드 등의 함량을 엄격히 하도록 규정

http://www.xinhuanet.com/science/2022-11/09/c_1310674756.htm

<https://3g.163.com/dy/article/HLBT7M2305128AKO.html>

https://m.thepaper.cn/baijiahao_20275348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210/t20221025_3847603.htm

http://www.gov.cn/gongbao/content/2022/content_5697988.htm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교통 청사진’ 발표

말레이시아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는 온실가스 핵심 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교통 청사진’을 발표. 이 청사진은 저탄소·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 친환경 수송수단 보급, 대체 에너지 산업 개발, 수송부문 전환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

배경 및 목적

- 말레이시아 인구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 말레이시아 인구는 2010년 2,830만 명에서 2016년 3,17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40년에는 4,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인구 증가에 따라 2018년 교통수단 숫자는 2014년 대비 15.6% 증가. 전체 교통수단 중 승용차(45.78%)와 오토바이(45.7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수송부문은 말레이시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30%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
- 저탄소 교통 청사진(Low Carbon Mobility Blueprint, LCMB 2021-2030) 발표
 - 말레이시아 환경 및 수자원부(KASA)와 말레이시아 그린테크놀로지 및 기후변화 센터(MGTC)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4개 부문 10개 전략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
 - 이 청사진은 저탄소·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 친환경 수송수단 보급, 대체에너지 산업 개발, 수송부문 전환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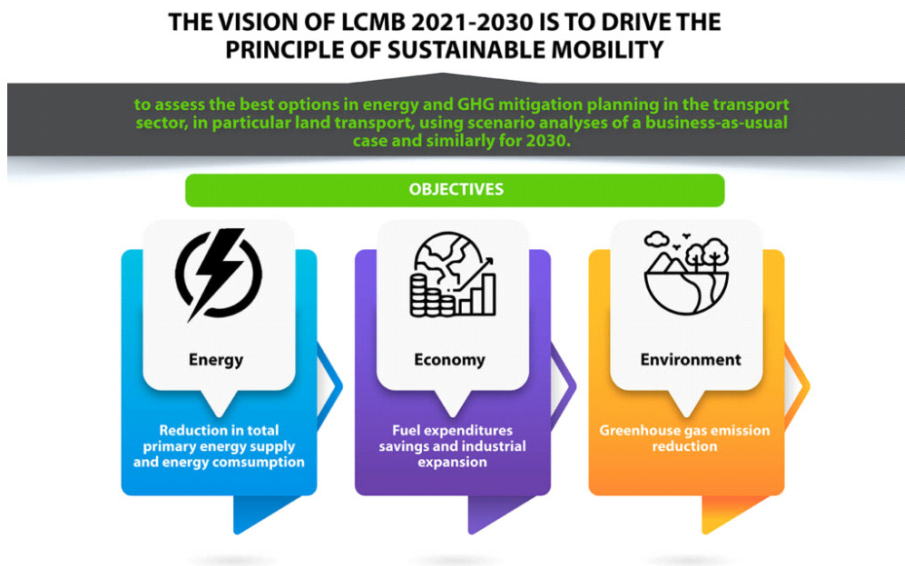
저탄소 교통 청사진의 주요 내용

- 저탄소·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 보급 확대
 - 친환경 수송수단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지원금 마련
 - 친환경 경제운전(Eco Driving) 지원
 -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경제운전 프로그램 운영
 -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030년까지 1킬로미터당 95그램으로 감축
- 친환경 수송수단 보급

- 전기차
 - 2025년까지 정부 관용차량의 50%를 전기차로 교체
 - 전기택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지원
 -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세금 면제 인센티브를 신설해 대중화 추진
 - 2025년까지 AC 단상 충전소 9,000개 및 DC 단상 충전소 1,000개 설치
 - 국내 전기차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금 유치
 - 전기차 보급을 위한 통합 에코시스템 구축
- 전기버스
 - 전기버스 투자 및 대여 지원금 지급
 - 전기버스 보조금 신설
 - 국산 전기버스 개발을 위한 투자금 유치
- 전기 오토바이
 - 공공 기관의 전기 오토바이 상용화
 - 배달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기 오토바이 사용 시 세금 감면 지원
 - 배터리 교환 충전 서비스¹⁾를 위한 지원금 마련
 - 국산 전기 오토바이 개발을 위한 투자금 유치
- 대체에너지 산업 개발
 -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디젤 연료 사용
 - 차량 유형 인증서(Vehicle Type Approval)에서 저탄소 인증을 도입
 -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수소경제 구축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산업구조 구축
- 수송부문 전환
 - ‘승용차 도시’에서 ‘대중교통 도시’로 전환
 -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
 -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 자가용을 외곽에 두고 대중교통을 통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Park and Ride) 확대

1) 전기차의 배터리에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지정 배터리 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와 교환하는 방식. 충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

- 교통혼잡도 완화
 -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 교통관리 효율을 높여 도로 이용 편의 증진
- 도로 운송 화물 전환
 -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
- 자전거, 보행 등의 이동 체계를 구축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구간을 연결하는 퍼스트 앤 라스트 마일(First & Last Mile) 구축
 - 공유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전자결제 확대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정비



[그림]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청사진 (출처: MGTC)

<https://www.kasa.gov.my/resources/alam-sekitar/Low-Carbon-Mobility-Blueprint-2021-2030/84/>

<https://www.mgtc.gov.my/what-we-do/low-carbon-mobility-2/low-carbon-mobility-blueprint/>

<https://www.nst.com.my/business/2021/04/683754/low-carbon-mobility-blueprint-drive-larger-participation-ev-players>

세계도시동향 제540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